

### 박지원 '국정원 X파일' 언급

# 국힘, 정보유출 성토·민주, 자제 요청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사회 인사의 존안(存案)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이후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박 전 원장의 사과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전 원장이 지난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에서 정·재계 인사들의 존안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폭로한 이후 '정보 유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서 꼭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 못해 아쉬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국정원에서 X파일을 보관하고 있다.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여야의 불행한 역사를 남기면 안 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폐기해야 하는데 못 했다"고 답했다.

X파일에 대해선 "30년간 있는 것이 메인 서버에, 또 일부 기록으로 남아있다"며 "언론인 정치인 기업인 (등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카더라, 소위 증거가 정보라고 불쾌한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또 "민약 문제인 전 대통령, 박 전 원장이 영원히 집권한다면 이 파일을 공개하지 않지만, 민약에 다른 대통령이, 다른 국정원장이 와서 공소시효도 넘은 특정한 자료를 공개했을 때 얼마나 많은 큰 파장이 오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박 전 원장은 X파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자료도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장을 위반하면 내가 또 감옥 간다"면서도 "자세하게 얘기

못 하지만 근본적으로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의원님들, 민약 이거(X파일)을 공개하면 의원님들이 혼란한다고 했더니 하태경 정보위원회 간사가 자기는 그렇게 안 싶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왜 내가 이혼당하냐"라 했다"고도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다음 날 공개된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개인정보를 위해서도 그 정도는 밝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전 원장의 발언이 일파파파 확산하는 가운데 국정원은 11일 보도 자료를 내고 "사실 여부를 떠나 원장 재직 시 알게 된 직무 사항을 공표하는 건 전직 원장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자 박 전 원장은 11일 SNS에 "국내 정보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지만 이제 그 자료들이 정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하고, 실제로 국회도 이러한 논의를 하다가 중단된 것이 아쉽다는 점을 말한 것"이라 해명하며 공개 발언에 유의하겠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의 사과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감을 내세우려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하 의원은 13일 이날 SNS에 "공직을 통해 취득한 국가의 기밀을 언론에 관심끌기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박 전 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박 전 원장의 자제를 요청했다.

### 박 전 원장 "국정원 정재계 X파일 공개되면 문제"

#### 국힘 "尹 X파일 주장하며 존재감 내세워"

#### 민주서도 비판 "3년 침묵의 시간 가져야"

포문을 연 것은 박 전 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지목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다. 해외 출장 중인 하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퇴임하더니 소설가가 되셨냐"라며 "정권 교체되고 나니 원장 시절 했던 부적절한 일을 때문에 매우 불안하신가 보다.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 정보위원인 저를 공격하는 구식정치"라고 쓰여졌다.

국민의힘은 12일 "명백한 국정원 직권남용 위법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철저히 보안이 지켜져야 할 국정원의 활동에 대해 전직 국정원의 수장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면서 "윤 대통령의 X파일도 있고"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정치적 존재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선의 아침저녁' 인터뷰에서 "국정원장이라는 자리가 한 3년 정도는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었던 것처럼 하실 말씀이 있어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정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도 안 하시는 게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한 비판에도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 전 원장이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대외비를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박 전 원장이 정·재계 인사들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메시지를 부각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뉴스시스

### "정읍시민 의견 충실히 반영"

#### 시 민선8기 인수위 활동 본격

민선 8기 정읍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철수)가 시정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민선 8기 정읍시정 파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인수위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인수위 사무실이 마련된 정읍시 태평로(시거상당길)의 정읍시 청년창업셀린지숍 회의실에서 시정 국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참석 대상은 인수위원 15명 전원이며, 보고는 국·실·과장의 현안 업무 보고에 이어 시정 현황과 주요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보고 일정은 첫날인 13일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성장전략팀, 감사과, 총무과 등의 직속실과와 문화행정국 소관의 문화행정과, 관광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등 5과 1소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이튿날에는 복지교육국의 5과 1소와 경제환경국 5과 1소의 보고가 이어지고,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도시안전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과·소에 대한 보고가 이어진다.

인수위는 이번 국실별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현황과 주요 사업을 점검한 후 민선 8기 정읍시정의 핵심과제를 정리함으로써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의 시정 파악과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철수 인수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시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된 민선 8기 핵심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인수위원 15명으로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13일부터 인수위원 위촉식 및 전체 회의, 국실별 보고와 함께 인수위원 의견 개진 등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남원시장직 인수위, 시정비전·목표 제정 직원 공모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는 민선8기 출범을 앞두고 시정비전과 시정목표를 제정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당선인의 정책기조 공유와 직원과의 소통 강화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시의 비전을 표현하는 간결한 구호 형식의 시정비전과 민선8기 시정의 중점추진방향과 시민의 뜻을 담은 시정목표를 제안하면 된다.

공모는 6월 17일까지로, 심사를 거쳐 당선직을 6월말에 선정할 예정이다. 상금은 금상 100만원, 은상 70만원, 동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 등을 지급

할 예정이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민선8기가 성공적으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시정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원=김기우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尹정부, 안보 아마추어에 경제 위기감 無"

### 민주 우상호 비대위 첫 회의서 안보·경제 대응 역량에 '맹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부터 윤석열 정부의 안보·경제 대응 역량에 '맹목'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 후 친이재명계(친명)와 비명계간 계파갈등을 의식한 듯 입을 모아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 연의 방사포를 발사한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영화를 관람한 것을 겨냥해 "윤석열 정권의 대응 방식은 대단히 불안하고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여러가지 문화 행사에 참석해서 문화 융성을 돕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때와 장소가 적절해야 한다"며 "발로는 대단히 강력한 안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주장할 정도로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실제 행동은 너

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모습에서 윤석열 정부 안보정책의 정체성 원치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도권에 가장 위협적이라는 북한의 방사포 발사 도발에도 정부는 그 사실을 바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보고를 받았다는 윤 대통령은 영화 보며 팝콘 먹는 데이트나 즐겼다고 하니 안보 걱정도 군 통수권자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해야 하는 이상한 괴연 정상인가"라고 거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한달을 맞아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대통령이 함께 한 법상에는 화물연대 파업과 물가대책 등 민생현안은 없었다"며 "원자재 값 급등에 연일 고공행진하는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위기감 확산되고 있고 경수수치마저 4월에 적자로 돌아선 상황인데 정부여당의 오찬집에서는 이런 위기감은 커녕 축하와 덕담만 오갔다고 하니 참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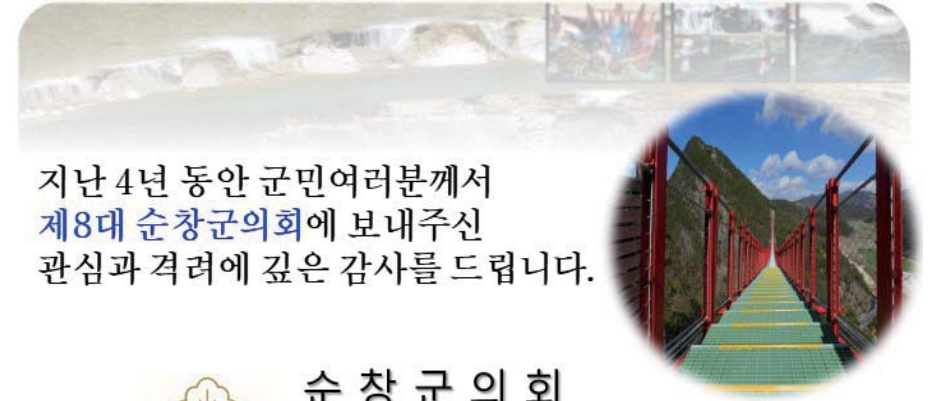
로 걱정스럽다"고 한탄했다.

경제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당의 원구성 협상 '양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거나,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합의에 대한 안보인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우 위원장은 "국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안보가 선결과제"라며 "법사위 위상을 바꾸든지, 바깥 생각이 없으면 의석 비례에 따라 법사위를 안보화든지 권 원내대표의 입장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안전문제를 등을 논의하고 소비자 물가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당장 법정기관을 한참 넘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에는 여야가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 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와 고통이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가세했다. /뉴스시스

## 자치분권 2.0시대 순창군의회가 군민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군민여러분께서 제8대 순창군의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순창군의회

56039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063)650-1021,1043 fax)063)652-6782

<http://www.sunchangcouncil.go.kr>